



심리상담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방안

「상담심리학 및 실습」과 「철학이란 무엇인가」강의페어링

심리학과 4학년, 전예슬, 201321992, 이진희 교수님 지도

목적

상담심리학의 경우 내담자 복지를 위한 상담심리사의 윤리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같은 대표적인 심리학회들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 상담심리사는 상담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며 전문직으로서 신중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타당한 윤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윤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한다. *여기서 언급된 윤리적 딜레마는 개인의 자율권(비밀보호)과 공익이 서로 상충될 때 발생하는 딜레마를 말한다.

사례: Tarasoff(1976), Redmond(1996)

1) Tarasoff 사례: 공익을 중시한 사례

상담자의 비밀유지와 관련되어 직접적인 분쟁으로 된 사건으로 1976년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보인다고 판단될 때 상담자는 의도된 희생적 사고를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다양한 법제정을 통해 비밀 유지의 한계상황과 대응방법들이 매뉴얼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Redmond 사례: 개인의 비밀보호를 중시한 사례

기존의 Tarasoff사례 이후 공개의 원칙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상담자에게 정보의 공개가 강요되었으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Redmond 사건에 대한 1996년 일리노이 주 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상담가의 비밀유지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권이 없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상담에서의 가치 또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APA 윤리강령 내 비밀보호 관련 사항

APA의 심리학자 윤리강령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 중 4장에 따르면 상담에서 내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적용범위의 한계 사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내담자가 자타해의 위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나 법적인 의무가 상담자의 비밀보호 의무보다 윤리적으로 우선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내담자의 비밀유지 권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에게 법적인 강제 의무를 지우지는 않으며 면책특권 또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점 분석

상담자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로 학회의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상담자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내담자의 비밀보호에 대한 한계 사항이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딜레마 해결에 상담자의 판단권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담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사건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담자의 주관적·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상담자의 주관성과 부담감, 책임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Drane의 윤리결정 모형에 따르면 상담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시 보통 보편적인 도덕 수준으로 미루어 직관적 수준에서 즉각적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 자체가 평상시의 가치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상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항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윤리강령에서 나타난 판단 전략은 개인(상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가까우며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리학적 대안 및 근거

1) 비조직적 이론(unarticulated theory): APA 윤리강령에 사용된 윤리이론

비조직적 이론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윤리원칙의 우위를 논의나 관례에 의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기존 관례는 앞으로 어떤 윤리문제가 발생할지 예기치 못함으로 해서 한 사례에서 어떤 윤리원칙을 우위에 두었다고 하여 비슷한 다른 사례에 그 윤리원칙을 적용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윤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2) Toulmin의 정당근거론(good reasons approach): 연구자가 제안하는 방향

① 윤리결정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가능한 그 윤리결정으로 인한 '득'과 '실'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정당근거론은 윤리판단이나 윤리적 사건규명의 논리성에 있어 무엇을 합당한 근거로 볼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Toulmin은 가능한 '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윤리결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상담치료의 특수성에 따라 장기적인 '득'을 극대화함으로써 ②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상담자-내담자 특권(비밀보호)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방향으로 윤리강령이 수정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비밀보호의 원칙은 공개의 원칙이 가져올 결과보다 더 큰 '득'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된다.

이렇듯 정당근거론에 따른 윤리결정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방향으로 윤리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담자의 주관적인 판단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성 또한 낮아지므로 치료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우월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어진다.

참고자료

김은희(1991), "상담윤리 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 윤리강령의 방향모색"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만지(1992), "사회사업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 연구 : 복지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노시온(2014), "정신분석가의 비밀유지의무와 보고의무의 대립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정신분석 대학원.